

【번역논문】

地域概念의 政治性*

나카미 다츠오(中見立夫)**

번역: 김준영***

┃ 차 례 ┃

머리말

1. 滿洲란 무엇인가
2. ‘滿洲問題’에서 ‘滿蒙問題’로
3. ‘滿蒙’개념의 특수성
4. ‘滿蒙’의 확대와 ‘蒙疆’의 등장 그리고 ‘東亞’라는 지역
맷음말-지역개념의 정치성-

머리말

이 책에서는 여러 각도로 ‘아시아’라는 대상으로의 접근 방식, 혹은 그것의 모습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시아’라는 개념은 막연하면서, 동질적인 문화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당연하지만, 우리들의 ‘아시

* 中見立未, 1993 「地域概念의 政治性」 『アジアから考える[1] -交錯する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273~295쪽.

** 東京外國語大學 教授

*** 경희대학교 사학과 석사수료

1) 小林道彦, 1992년 3월, 「日清戰後の大陸政策と陸海軍 - 一八九五~一九〇六年」 『史林』75-2,

아像'은 항상 분열하고 있다. '아시아'라는 존재가 것처럼 모호하더라도 그 안의 국가나 지역 그리고 민족을 우리들이 과거에 어떻게 인식하였고 접근하려고 했는지가 문제가 된다.

물론 비교적 최근까지 우리들은 '서아시아'나 '남아시아' 등의 지역이나,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해서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반대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는 보다 더 가까운 존재였다. 그런데 우리들은 언제부터 '동아시아'라는 명칭으로 어느 지역을 하나로 묶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였을까. '동아시아'는 'East Asia'의 번역어라는 점은 쉽게 이해할 것이다. 그렇지만 'East Asia'를 '동아시아'라고 번역하게 된 것은 戰後이며, 戰前期에는 '東亞'라고 표기하였다. '동아'와 '동아시아'는 같은 말의 다른 표기임에 틀림없다. 실제로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의 "East Asian Institute"는 자신들의 연구소를 '東亞研究所'라고 지칭한다. 그러나 '동아'와 '동아시아'라는 단어에서 받는 뉘앙스는 큰 차이가 있다. '동아'라고 말하면 누구라도 '대동아공영권'과 과거의 침략을 연상한다. 東亞國內航空이 국제선 영업을 시작할 때, 회사명을 '일본 에어시스템'이라고 개칭했던 것도 '동아'의 뉘앙스를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일본 에어시스템'이 처음으로 영업권을 가진 곳이었던 한국에 '東亞日報'라는 신문사가 있는 점을 보면, 이 판단이 너무 신중하지 않았는가 의문이 생긴다. 오히려 이 항공사가 설립될 때, '동아시아國內航空'이라고 하지 않고 '東亞國內航空'이라고 이름붙인 '국제감각'이야말로 문제이다.

하여튼 '동아시아' 또는 '동아'라는 용어는 그 지역에 내재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개념이었다. 메이지 시기 이미 東亞同文會가 설립되었고, 『東亞時論』이라는 잡지도 있었던 점으로 보면, 그 유래는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사고체계에 '동

야'라는 말이 확실히 각인되었던 것은 쇼와 초기이후 주로 독일 地政學의 영향으로 '東亞協同體'이나 '大東亞共榮圈'이라는 구상이 제출되었을 때부터라고 생각된다. '東洋協同體'나 '大東洋共榮圈'이 아니라 '동아협동체'나 '대동아공영권'이 되었던 것은 당시 일본제국주의가 지향한 범위가 '東洋'이 가진 지역의 넓이보다도 '東亞'가 가리키는 공간이 보다 적절히 표현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패전으로 '동아'는 점차 배척되었지만, 곧 일본의 경제적 부흥, 대외진출의 재개와 더불어 '동아시아'로 바뀌어져 소생하였다. 여기에는 '동아시아'로 지역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게다가 '동아'가 아닌 - 상황이 존재했던 것이다.

戰前期 일본의 대외진출 과정에서 그 경로는 한반도에서 현재 중국 동북 지역, 나아가 내몽골 일부, 그리고 華北에 이르는 루트였고, 곧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은 중국 전역,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 글에서는 이 과정에서 일본인의 대외관으로 형성된 독특한 지역개념을 검토한다. 여기서 들고자 하는 지역 개념은 모두 일본인 입장에서 어느 지역을 파악하고, 거기서 존재하는 문제를 스스로의 분석구조 속에서 자리매김함으로써 성립된 것이다. 당연히 그 지역에서 역사적으로나 자생적으로 발생한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큰 위화감을 불러일으켰다. 막연한 '아시아'가 아닌 구체적이고, 또한 단계적인 아시아 지역으로의 접근방식을 검증하게 될 것이다.

1. 滿洲란 무엇인가

근대 일본의 대외진출에서 최초 대상은 조선이었다. 일본인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상황을 '조선문제', 대한제국 성립 이후는 '한국문제'로 파악

하였다. 게다가 일본은 청일전쟁의 승리로 청국으로부터 요동반도를 할양받았지만, 삼국간섭으로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 후 러시아의 세력 확대에 직면한 일본은 외교적인 선택지로 ‘滿韓交換論’ 또는 ‘滿鮮交換論’을 검토하였다. 일본은 만주에 대한 러시아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대신, 러시아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 일본의 정책 입안자가 ‘만주’와 ‘한국’의 정치상황을 분리하여 따로 생각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결국 러시아 측의 행동과 영일동맹으로 일본은 ‘滿韓不可分論’으로 기울어지고, 러일전쟁으로 나아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적어도 러일전쟁이 발발한 시점까지는 ‘만한’이나 ‘만선’이라고 부르는 경우, ‘만주’ 전역과 조선을 가리키지만, 일본인의 의식에는 한반도에 우월적인 지위를 획득함이 일차적인 목적이었다. 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주’ 전역으로 세력을 확대해서, 조선을 노리는 러시아와 타협이 가능한가라는 맥락에서 나왔던 것이다. 따라서 ‘만한’은 광역적 지역개념이 아니라 ‘한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만주’에서의 러시아 문제를 결합시켜야 하는가, 또는 회피해서 과제를 이룰 수 있는가의 논의였다. 실제로 당시 일본은 장기적인 희망은 별개의 문제로 만주에 대한 구체적인 발판이 없었고, 또한 그렇게 할 실력도 없었다.¹⁾

그런데 여기서 검토해야 할 점은 ‘만주’라는 지역명과 그 범위이다. ‘만주’는 만주어의 ‘만주/Manju’의 漢語音寫이고, 원래는 만주민족이 만들어 낸 민족명 또는 국가명이었다.²⁾ 그러나 만주민족이 소위 ‘만주지방’을 ‘만주’라고 부른 경우는 없었다. 만주어 어휘 중에 ‘만주지방’을 의미하는 지역명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 만주민족을 비롯한 북방 유라시아 민족들에게 민

2) 神田信夫, 1992, 「滿洲という呼称」 『滿學五十年』, 刀水書房, 97~99쪽; 細谷良夫, 1990, 「マンジュ・グルンと満洲國」 『シリーズ 世界史への問い』8 <歴史のなかの地域>, 岩波書店, 105~135쪽.

족명, 부족명, 국가명은 一義的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각각의 지명, 지방명은 존재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광역적인 지역명이 민족명이나 부족명과는 별개로 형성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드물다. 예를 들면 몽골 민족의 경우 ‘몽골/Mongyol’은 원래 부족명이었고, 그 다음에 민족명이 되고, 그리고 몽골족의 생활공간을 ‘몽골’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또 몽골어에서 ‘키타드 /Kitad’는 어원적으로는 같은 몽골계로 상상되는 ‘契丹’에서 유래하지만, 漢民族과 그들이 사는 곳도 ‘키타드’라고 부른다. 이 ‘키타드’를 지역명으로서 범위를 생각하면 20세기 초까지 몽골인에게 그것은 만리장성내의 한민족 거주지를 말한다. 그러므로 몽골어의 세계에는 한민족이 생각하는 역사적 존재로서의 다민족 복합체인 ‘中國’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 중화민국이 성립하고서 ‘Dumdadu ulus’ 즉 ‘한가운데 나라’라는 의미의 ‘중국’을 번역한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북방 유라시아 여러 민족에서의 용례를 고려하면, 만주민족이 자기 역사적 생활공간을 ‘만주’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지만, 實例는 없다. 한 가지 이유로 만주민족이 청조를 수립하면서 중국 본토로 대거 이동한 점을 들 수 있겠다. 자신들의 발상지라는 의식은 있어도 이미 자신들의 생활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먼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가령 청조시대에 만주민족이 ‘만주’를 지역명으로도 썼다면 그것은 대청제국 전체를 의미했을 것이다.

그럼 ‘만주’는 언제, 어떻게 지역명으로 쓰이게 되었을까. 矢野仁一은 Du Halde 『支那誌』(J. B. du Halde, Description géographiqu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physique de l'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 [Hare : Henri Scheurleer, 1736], Tome quatrième)의 기술에 주목해서 Du Halde가 ‘만주’와 몽골을 합쳐 ‘支那의 타타르 / la Tartarie chinoise’라고 부르고, 그 중에

서 몽골에 관해서는 ‘大타타르/la grande Tartarie’, ‘西타타르/la Tartarie occidentale’ 내지는 ‘몽골인(또는 몽골족)의 토지/terres des Mongols ou Mongous’라고 하고, ‘만주’에 대해선 ‘東타타르/la Tartarie orientale’, ‘만주인(또는 만주족)의 토지/terres des Mantcheoux’라고 기록하였다고 지적한다. 일본에서도 17세기 중엽 『韃靼漂流記』 또는 間宮林藏의 『東韃紀行』에서도 알 수 있듯이 “西曆 19세기 초까지는 서양인도 일본인도 만주를 韃靼, 만주인의 國土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아직 만주를 지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1830년대부터 점차 ‘만주’를 지역명으로 사용하였고, 1840년대에 들어서는 “만주를 지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미 일반적으로 되었다”라고 기록하였다.³⁾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1794년(寬政 6)에 桂川甫周가 大黒屋光太夫에게 들은 내용을 토대로 편찬한 『北槎聞略』의 첨부지도 「亞細亞全圖」⁴⁾에 ‘滿洲’ 표기를 볼 수 있다. 이 지도의 왼쪽 끝에 “Азия(현재의 표기로는 Азия)”로 쓰여져 있는 점을 볼 때, 桂川는 光太夫가 러시아에서 가져온 지도에 따라 작성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 이 지도에는 ‘支那韃而韃’ - ‘キタイスカヤタルリヤ’라고 카타카나(片仮名)로 읽는 법이 붙어 있다 - 라고 크게 쓰고, 그 밑에 ‘滿州’와 ‘蒙古’라고 적힌 점을 보면 원판 러시아어 지도의 표기에는 분명히 Du Halde처럼 ‘만추/Маньчжу’를 민족명으로 표기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지명으로 ‘만추리아(マンチュリア)/Маньчжурия’라고 쓰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같은 경우로 1809년 高橋景保가 작성한 지도 「日本邊界略圖」나 그의 다른 지도 「新訂万國全圖」(1810년 작성)에도 볼 수 있다. 다만 高橋는 ‘滿州’가 아닌 ‘滿洲’라고 표기하였다.⁵⁾ 이 사실들을 볼 때 일본에서는 유럽

³⁾ 矢野仁一, 1941, 『滿洲近代史』, 弘文堂書房, 4~7쪽.

⁴⁾ 桂川甫周編著, 龜井高孝校訂, 1989, 『北槎聞略』(吉川弘文館의 附載地図와 龜井高孝의 해설 36~38쪽 참조.

에서 가져온 지도의 기재를, 중국 문헌의 지식을 활용해서 ‘滿洲’로 번역했지만, 처음부터 지역명으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또 高橋의 지도와 같은 시기 近藤重藏의 기술에도 분명히 지역명으로 ‘만주’를 사용하였다. 만약 앞에서 인용한 矢野仁一의 지적이 맞다면 일본에서 지역명으로 ‘만주’의 성립은 유럽에서 같은 용법인 ‘만츄리아’보다도 일찍이 대략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는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桂川, 高橋 등 에도시대 말기 蘭學者의 지리관, 또는 그 기초가 되었던 당시 유럽인의 지리관에 보이는 ‘만주’의 지역적 범위에는 주의해야 한다. 桂川와 高橋가 작성한 지도에는 모두 만주와 시베리아의 경계를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결정한 러청국경으로, 만주와 몽고는 大興安嶺으로 나누고 있다. 더 중요한 점은 盛京지방을 분명히 만주에서 분명히 제외시킨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이후 시대에 서양인이나 일본인이 부르는 만주 - ‘東三省’과 동일지역 - 와 달리, 당시의 청조 영내 통구스계 민족의 역사적 생활공간을 가리킨다. 따라서 현재 러시아령 沿海州 등을 포함하지만, 중국의 遼寧省은 들어가지 않는다. 遼東지방은 오래전부터 “Liaotong”으로 유럽의 지도에도 실려 있고, 漢人인구가 많은 곳이다. 그래서 요동지방이 ‘만주’에 포함되지 않고 성경지방이 제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동아시아로 진출하면서, 청국영역이 축소되고, 그리고 청조체제하의 동삼성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유럽인·일본인은 동삼성의 영역을 ‘만츄리아’ 그리고 ‘만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만주가 나타내는 공간은 20세기에 들어갈 때까지 변화하면서, 東北으로는 축소되면서 南으로는 확대되었다.

만주민족은 청조를 수립하면서 대거 關內로 이주해서 과거의 생활공간은 人口過小가 되었다. 청조의 이 지역에 대한 통치제도도 변화해서 19세기 후

5) 船越昭生, 1986, 『鎖國日本にきた「康熙図」の地理學史的研究』(法政大學出版局)所收 지도 57~62C 참조.

반이후에 한인들이 관내에서 만주로 대규모로 이주하기 시작한다. 한편 청조는 러시아의 진출도 있어서 1907년에 동삼성 총독을 둔다. 실제로는 ‘동삼성’ 그 후 ‘中國 東北’이라는 지역구조가 성립한 것은 이 시기 이후이다. 이전에는 요동 및 요서지방을 제외하고 이 지역의 주인공은 퉁구스계 민족과 몽골민족이었다. 이 지역의 역사는 이들 민족이 만들었고, ‘중국사’와는 다른 체계를 가진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 역사학자 G. McCormack은 서양인이나 일본인이 쓰는 ‘만주’ 용어에는 ‘제국주의적 함의’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⁶⁾ 20세기에 일본과 러시아가 이 지역을 침략한 사실을 생각하면 그 지적이 타당할 것이다. 중국인에게 ‘만주’는 제국주의 침략자가 이름붙인 지역명이고, 기피해야 할 용어가 되었다. 중국인이 ‘동삼성’을 ‘만주’라고 부르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 예외적 사례는 1927년에 설립된 ‘中國共產黨滿洲省委員會’이다. 이 위원회의 명칭은 당시 코민테른의 지역인식에 기초했던 것이겠지만, 그 시대 중국 공산당의 상황도 보여준다. 하여튼 일본인의 ‘만주’와 중국인의 ‘동삼성’에는 큰 간격이 존재했다. 이처럼 ‘만주’는 이상한 지역이었다.

2. ‘滿洲問題’에서 ‘滿蒙問題’로

러일전쟁 후 포츠머스조약과 북경조약으로 일본은 조선에서의 우월적인 지위와 ‘南滿洲’의 권익획득에 성공한다. 일본은 비록 전쟁에는 이겼지만, ‘北滿洲’는 여전히 러시아의 영향권에 있었다. 일본은 만주의 전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시 러시아와 전쟁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다.

www.kci.go.kr

⁶⁾ McCormack, Gavan, 1977, *Chang Tso-lin in Northeast China, 1911-1928*, Folkstone, Dawson, 4쪽.

원래 일본이 새롭게 손에 넣은 ‘남만주’의 권익도 러시아로부터 양도받은 것을 청조정부에 승인시킨 것에 불과하였다. 러시아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극동문제를 다룰 상황이 아니었고, 대체는 점차 일본과 유화, 나아가 협상 관계 수립으로 나아갔다. 러일전쟁 후 일본에게 ‘滿鮮’이란 일본이 획득한 세력권을 의미하고, 구체적인 지역으로는 ‘남만주’와 조선을 가리킨다. 일본은 조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지만, 남만주는 어디까지나 청조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당시 ‘만주문제’란 곧 ‘남만주’의 경영에 관한 문제였다.⁷⁾ 그렇지만 남만주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간도지방에서 조선인문제도 발생하고 있었다.⁸⁾

다만 ‘만선’을 단순히 일본의 현실적인 세력권이라는 생각을 넘어 적극적으로 하나의 역사적·문화적인 지역으로 파악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예를 들어 滿鐵의 후원을 받은 ‘滿鮮歷史地理’연구가 제시한 ‘만선’은 ‘만주’와 ‘조선’을 포괄하였다. 그 주재자였던 白鳥庫吉는 시점을 고대의 동북시베리아와 ‘만주’ 그리고 한반도에 걸친 퉁구스계 여러 민족의 활동에 관한 역사적 연구에 두었다. 白鳥에게 ‘만선’이라는 틀은 비교적 유효하였지만, 연구에 참여한 다른 인물들의 업적을 보면 ‘만주’와 조선의 관계사, 또는 만주사·조선사 각각의 영역에 관한 성과였다. 결국 하나의 커다란 통일성을 갖춘 역사문화권으로서의 ‘만선’을 설정하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실증하려고 한 것이 白鳥 다른 연구자들의 의도였다면, 그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다.⁹⁾

그렇지만 일본인의 대외인식에 ‘만선’이라는 지역개념은 얼마 동안 존속

7) 「滿洲問題に關する協議會」, 1906년(明治 39) 5월 29일, 閣議決定, 外務省編纂, 1965,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上)』, 原書房, 260~269쪽.

8) 森山茂徳, 1987, 『近代日鮮關係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227~249쪽.

9) 旗田巍, 1969, 「<滿鮮史>の虛像」 『日本人の朝鮮觀』, 勁草書房, 180~198쪽 ; 中見立夫, 1992, 「日本の東洋學黎明期における史料への探求」 『神田信夫先生古稀記念論集 : 清朝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114~120쪽.

하였지만, 큰 의미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1908년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고 곧 1910년에는 ‘일한병합’을 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 했기 때문에 ‘만선’이라는 틀은 거의 의미가 없어지고, 조선의 부분은 ‘만선’에서 탈락하여 일본에 흡수되고, ‘만주문제’라고 해도 구체적으로는 ‘남만주’만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만주문제’ 또는 ‘남만문제’도 그다지 긴 수명을 가지지 못했다. 제국주의에는 어느 지역을 세력권으로 하면, 경영의 안전을 위해 더욱더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는 자기증식의 법칙이 있다. 1908년 제 1차 러일협상으로 ‘남만주’는 일본의 세력범위로 ‘북만주’는 러시아의 세력범위로 상호 인정하였고, 일본은 ‘북만주’를 러시아의 세력 범위로 인정한 이상 진출의 방향을 서쪽으로 돌려 ‘내몽골’을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유일한 일본의 대항세력이면서, 또 이미 일본이 ‘외몽골’을 그 세력범위로 인정한 러시아와의 조정이 필요하였다. ‘내몽골’ 그중에서도 동부지역을 일본의 세력범위로 하는 것은 장기적인 전망에서 중국북부, 북경으로의 발판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내몽골’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이해조정할 기회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다.

신해혁명을 계기로 외몽골 지방의 몽골 王公들은 독립을 선언해서 복드한 정권을 수립했지만 일본을 비롯한 열강은 이 몽골독립운동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음을 감지했다. 독립 움직임은 내몽골까지 파급되고 있었지만, 러시아 외상 사조노프가 몽골 문제에 관한 성명서발표를 하면서 일본과 러시아는 내몽골의 세력범위를 분할하려는 교섭을 시작되었다. 원래 러시아는 몽골의 독립을 인정할 생각이 없었고, 외몽골만을 대상으로 복드한정권에 의한 중국 종주권하의 자치를 구상하고 있었다. 이 시기 러시아는 국내의 혁명운동과 유럽정세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극동문제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일본과 유화적인 관계를 원했다.¹⁰⁾ 따라서 러일 교섭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1912년 7월에는 내몽골의 각자의 세력범위를 결

정한 제 3차 러일협상이 성립되었다. 이 협상으로 내몽골은 ‘그리니치 기준 동경 116도 27분’을 기준으로 동쪽은 일본에게, 서쪽은 러시아에게 분할되었다.¹¹⁾

대체로 이때부터 일본인들에게 새로운 지역개념으로 ‘滿蒙’이 등장하였다. 1913년(大正 2) 외무성 문서에 “南滿에서의 제국특수의 지위와 日露協約에 기초한 세력범위의 확정을 고려해서 이제까지 종종 世人들이 막연하게 滿洲問題解決論을 주장하였다. 또 최근 제 3차 일러협약으로 우리 세력범위를 內蒙古 東部로 확장하자 이른바 만주문제에서 더 나아가 滿蒙問題解決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¹²⁾는 상황이 적혀있다. 이처럼 ‘만몽’이라고 해도 ‘만주’와 몽골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남만주’와 ‘東部 內蒙古’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열강들이 일본의 세력범위로 인지해도 이 지방이 중국에 귀속된 이상 중국 정부에게서 무엇인가 법적 권리를 획득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권익’, 다시 말하면 권리 및 그것을 근거로 발생하는 이익은 실체화되지 않는다. 1915년의 ‘對華 21개조 요구’, 또는 ‘南滿東蒙條約’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권익을 현실화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남만동몽조약’으로 얻으려는 일본의 특수권익도 중국에서 반제민족주의 운동이 고조되면서 실체화되기 어려워졌다. 이후 ‘만몽권익’ 또는 ‘만몽문제’라는 용어가 보급되지만, 그 범위와 실체에 대해서는 자주 문제가 되었다.¹³⁾

외교사에서 말하는 ‘제국주의 시대’에는 열강이 약소국가·민족에 대해

10) 中見立夫, 1984, "A Protest against the Concept of the "Middle Kingdom": the Mongols and the 1911 Revolution," Eto Shinkichi and Schiffrin, Harold Z.(eds.), *The 1911 Revolution in China: Interpretive Essays*, Tokyo, University of Tokyo Press, 129~149쪽.

11) 「第三回日露協約」, 1912년(明治 45) 7월 8일, 外務省編纂, 1965, 앞의 책, 369쪽.

12) 「支那に關する外交政策の綱領」, 1913년(大正 2), 外務省編纂, 1965, 앞의 책, 369~377쪽.

13) 信夫淳平, 1932, 『滿蒙特殊權益論』, 日本評論社, 140~154쪽.

노골적인 힘으로 불평등한 조약을 강요해서, 식민지화 내지는 반식민지화하였다. 일본의 대외진출도 이와 같은 흐름이었다. 예를 들면 조선의 식민지화와 일본의 세력권으로 ‘동부 내몽고’를 편입시키는 과정을 봐도 대항세력인 러시아 및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열강에게 승인을 얻어야 달성할 수 있었다. ‘만몽’도 실제로는 ‘남만주’와 ‘동부 내몽고’에 불과하였지만, 여기서 후발 제국주의국가 일본의 팽창이 열강의 동향에 규제받는 한계성과 정치성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만몽’이라는 지역개념은 다음 장에서 보듯이 현지인에게 매우 특수하며, 위화감이 있는 개념이었다.

3. ‘滿蒙’개념의 특수성

신해혁명으로 청조 체제가 붕괴하고 몽골이 독립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남만주’에서 ‘동부 내몽고’로 진출을 꾀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몽골인도 한인도 ‘동부 내몽고’나 ‘만몽’이란 단어를 매우 기이하게 생각했다.

원래 몽골인들은 큰 지역틀로서, 대략 청조 통치 시기의 ‘내몽골/Doturyadu Mongyol’과 ‘외몽골/Гadaydu Mongyol’의 구별이 존재했다. 그러나 內·外라고 부른 것은 만주인이나 청조정부의 감각이고, 몽골인은 ‘우브르 몽골/Öbür Mongyol’과 ‘아르 몽골/Aru Mongyol’으로 구별했다. ‘우브르’·‘아르’의 뉘앙스는 고비사막을 경계로 陽과 陰, 南과 北의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몽골 민족에게 ‘내·외몽골’로 구분하는 인식이 없다. 덧붙여 말하면,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漢語의 ‘內蒙古’를 몽골어로는 ‘우브르 몽골’이라고 한다. 청조 통치체제기에 내몽골의 기초가 되었던 것은 ‘旗/qosiyu’이고, 게다가 다분히 명목적이지만 ‘盟/Ċryulyan’이라는 機構가 존재했다. ‘내몽골’의

서쪽방면에는 烏蘭察布盟(Ulanab) 및 伊克昭盟(Yeke uu)이 있었고, 동쪽방면에는 卓索圖盟(usutu), 昭烏達盟(uu-da), 錫林郭勒盟(Silin Yool), 哲里木盟(irim)이 있었다. 다만 이것은 청조가 만든 구분이고, 몽골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 ‘동부 내몽고’ 또는 ‘東蒙’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한다. ‘동부내몽고’란 어느 곳이나면 결국 제 3차 러일협상으로 일본이 손에 넣은 새로운 세력범위를 가리킨다. 이 지역들은 그때까지 누구도 인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일본인 외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었다.

大正·昭和시기의 일본인은 ‘만몽’이라는 조합이 몽골민족과 만주민족의 역사적 관계를 조금 안이하게 이해해서, 漢民族은 체쳐두더라도 몽골민족에게는 이해하고 공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도 몽골인에게는 이상하게 들렸다. 청조의 민족 구성을 살펴보면 창건기에는 ‘滿·蒙·漢’, 그 이후 ‘滿·蒙·藏·回·漢’ 5개 민족이 주요 구성원이다. 몽골인에게 청조 지배체제란 몽골 王公과 만주인 황제의 주종관계를 기축으로 해서 정치·종교·경제·문화의 다양한 관계로 맺어 있다고 해석되었다. 말하자면 본래 몽골인 황제를 세워야 할 위치에 만주인 황제가 해당하고 그것과의 관계를 기초로 한다. 그래서 청조의 부흥이라는 구호는 그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만몽’인가. 다시 말해서 몽골민족과 만주민족만을, 혹은 몽골과 만주지역만을 묶어야 하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이 점은 이른바 ‘만몽독립운동’의 실태로 잘 나타난다.

‘만몽독립운동’은 1911년 신해혁명 시기의 제 1차와 1916년 袁世凱의 帝制계획이 발단이 된 ‘第三革命’때의 제 2차로 총 2차례 계획되었다고 한다. 모두 중국 본토의 정치적 혼란을 이용했다는 특징이 있고, 청조 황족의 肅親王 善耆와 일본의 ‘大陸浪人’ 川島浪速 등이 중심이 되어 일본의 정부와

군부의 일부에서 원조를 받아 제 1차 경우는 내몽골·할하친의 친왕 貢桑諾尔布, 제 2차에는 내몽골·투메트출신의 巴布札布와 제휴해서, ‘만몽독립왕국을 건국하려고’¹⁴⁾ 했다고 이해되어 왔다.

그렇지만 사료에 따라 사태의 전개를 추적하면, 과연 ‘만몽독립운동’이라고 말할 만한 실체가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 ‘제 1차 만몽독립운동’에서는 善耆와 川島가 ‘만몽독립왕국’과 같은 몽상을 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한 川島의 계획은 원세개정권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일본정부에게 저지당한다. 그러다가 그 후의 단계부터 일본측과 貢桑諾尔布와의 제휴가 나타난다. 그러나 모든 사료에 貢桑諾尔布는 한 번도 ‘만몽독립’과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처음에 복드 한정권이 지향한 ‘대몽골국’으로 참가해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내몽골의 통일적 행동을 모색하였지만, 어떤 실력도 없었다. 거기에 이 지역에 영향력을 넓히려는 일본측이 접근해서 무기구입 자금을 제공한다. 그런데 무기 수송과정에서 중국측에게 적발되어 일본측의 의도는 좌절된다. 川島의 몽상과 사소한 무기밀수사건을 연결시킨 것이 ‘제 1차 만몽독립운동’의 실태이며, 貢桑諾尔布에게는 전혀 ‘만몽독립’의 구상이 없었다. 다만 단순히 실력이 없는 그에게 일본의 일부세력이 구체적인 원조를 시사했기 때문에 양자의 제휴가 있었을 뿐이다. 貢桑諾尔布는 곧 원세개에게 회유받아 그 정권에서 요직인 蒙藏事務局總裁에 취임한다. 貢桑諾尔布의 행보는 약소세력의 정치지도자에게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다.¹⁵⁾

‘제2차 만몽독립운동’의 몽골측 관여자로 알려진 巴布札布도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처음에는 복드 한정권에 참가해서, ‘대몽골국’실현을 위해 활동한다. 그러나 얼마 후 몽골문제해결의 방향이 카흐타체제의 구축으

14) 栗原健, 1966, 「第一次, 第二次滿蒙獨立運動と小池外務省政務局長の辭職」 『對滿蒙政策史の一面』, 原書房, 141쪽.

15) 護雅夫 編, 中見立夫 著, 1983, 「グンサンノルブと内モンゴルの命運」 『內陸アジア・西アジアの社會と文化』, 山川出版社, 411~434쪽.

로 나타난다. 이 체제가 몽골을 ‘중국종주권내의 외몽골자치’와 ‘독립의 부정과 내몽골 분리’형태로 가져갈 것이 분명해지면서 이에 반발한 巴布札布는 독자적인 행동으로 내·외몽골경계에 내몽골인 병력을 모은다. 곧 巴布札布는 카흐타체제에 불만을 가진 내몽골인의 상징이 되어 중국 및 북드 한 정권 양쪽에게 골치 아픈 문제가 되었다. 한 때 러시아의 알선으로 巴布札布군단이 외몽골로 분산이주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듯했으나 이때 등장하는 이가 일본인이다.

당시 중국본토에서는 원세개가 제위에 오르려는 계획을 진행하면서, 각지에서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원세개를 실각시키기로 정해서 각지의 반원세개운동을 조장하기로 한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일본육군참모본부와 외무성은 肅親王이나 川島 혹은 内田良平 등 ‘대륙낭인’을 통해 이미 완전히 고립되어 있던 巴布札布와 그의 군단을 이용하려고 했다. 巴布札布가 러시아로부터 제기된 알선책을 최종적으로 거부하고 일본과 제휴했던 것은 비참한 모습으로 외몽골로 분산이주해서 자신의 이상을 부정하기보다는 일본과 관계를 맺어서 다시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행동의 근본에는 강한 反漢의식과 내몽골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 숙친왕이 내세운 ‘대청제국의 부흥’이 그나마 낮고, 일본으로부터 구체적인 원조도 얻을 수 있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원세개가 급사하자, 일본정부는 새로 중화민국대총통이 된 黎元洪을 승인하는 방침으로 전환했다. 그 후에 일어날 巴布札布군단의 南進은 그들을 버린 일본에 대한 시위였다. 이 행군 중에 巴布札布는 張作霖부대와 충돌해서 전사했다. 일본에서는 川島의 몽상을 바탕으로 巴布札布와의 제휴부터 그가 전사할 때까지를 ‘제 2차 만몽독립운동’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측에게 巴布札布는 반원세개운동 중에 이용

하고 버린 장기말에 불과하고, 또 巴布札布에게 일본은 완전히 폐색이 짙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원조해주는 상대였기 때문에 제후한 것에 불과하다.

‘만몽독립운동’의 실상은 이와 같다. 그렇다면 왜 ‘만몽독립왕국을 건국 하려고’ 했다는 허상이 성립되었을까. ‘만몽독립운동’이란 명칭은 1936년에 간행된 『東亜先覺志士記伝』과 『川島浪速翁』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동아선 각지사기전』에서 이 ‘만몽독립운동’의 의의를 “후년에 실현된 滿蒙建國의 필연성을 시사한 것”(同書, 中卷, 323쪽)이라고 서술한다. 결국 川島 등 ‘대륙낭인’의 숙원인 ‘만몽문제의 해결’이 다른 방법인 ‘滿洲國’이라는 형태로 달성된 뒤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연성’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자신의 가치판단에 맞게 재편집해서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그 허상이 戰後에도 어떤 검증도 받지 않고 이어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지적했듯이 실제로 貢桑諾尔布나 巴布札布는 ‘만몽’지역개념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없으며, 어디까지나 문제의 차원은 내몽골이며 구체적인 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일본과 제후한 것에 불과하다.

4. ‘滿蒙’의 확대와 ‘蒙疆’의 등장, 그리고 ‘東亞’라는 지역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만몽’이란 실제로 ‘南滿東蒙’에 불과하며, 게다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열강들, 특히 러시아의 승인을 받은 일본의 세력범위였다. 그런데 제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러시아의 약체화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中東鐵道가 일본으로 매각되는 교섭이 일어났다. 일본은 ‘북만주’로의 진출을 도모하였다. 그런데 교섭이 성사되기 전에 러시아제국은 혁명으로 붕괴한다. 게다가 혁명의 영향이 시베리아로 파급되어 열강을 중심으로 간섭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段祺瑞정권과 1918년 군사협정을 맺는

다. ‘日華간의 합의에 기초한 일본육군의 北滿派遣이라는 형식’은 일본측에게 ‘중동철도의 관리권 장악과 북만 지역의 지배권 부식을 군사력을 토대로 달성하려는 의의’¹⁶⁾가 있었다. 한편, 중국 현지세력의 동향을 보더라도 일본과 관계를 가진 장작림군벌은 1919년에는 동삼성의 대부분 지역을 지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인이 생각하는 ‘만몽’은 만주 전 지역과 ‘東蒙’으로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일본이 기대한 ‘만몽’ 지역에서의 권익 확보는 중국 민중의 반제민족주의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고, 결국 일본군의 군사행동으로 괴뢰국가 만주국이 수립되어 ‘만몽문제’의 해결이 시도되었다. 矢内原忠雄은 “空文化된 우리 既得의 特殊權益을 되살리고, 권익을 옹호하고 발전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외교수단으로는 부족하며 실력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이 일어난 후에 이제는 31개의 각각의 특수권익이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만몽전체를 하나의 특수권익으로 보기에 이르렀다.”¹⁷⁾고 이 상황을 설명하였다. 게다가 일본군의 군사행동이 확대되면서 만주국의 영역은 東三省을 넘어 熱河省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일본인의 시점에서 ‘만몽문제’는 해결되었어도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침략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대상은 화북 지방 즉, 일본인이 말하는 ‘北支’와 내몽골 서부였다. 당시 내몽골 서부에서는 서수니트치(西蘇尼特旗) 王公德穆楚克棟魯普(漢語名은 德王)를 지도자로 남경정권에 높은 수준의 자치를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덕왕의 목표는 내몽골의 통일과 높은 수준의 자치에 있었지만, 이 운동에 주목한 자가 일본 관동군이다. 중일전쟁이 발발

16) 細谷千博, 1976, 『(復刻版)シベリア出兵の史的硏究』, 新泉社, 127쪽; 笠原十九司, 1983년 4월, 「日中軍事協定と北京政府の<外蒙自治取消>—ロシア革命がもたらした東アジア世界の變動の一側面」 『歴史學硏究』515, 18~33쪽, 44쪽.

17) 矢内原忠雄, 1934, 『滿洲問題』, 岩波書店, 30~31쪽.

하고 진격해 왔던 관동군의 지지를 토대로 덕왕은 1937년에 ‘蒙古連盟自治政府’를 조직한다. 이어 1939년에는 일본 괴뢰정권인 ‘察南’(차하르성 남부)과 ‘晉北’(산서성 북부) 두 정권과 합체해서 ‘蒙古連合自治政府’가 만들어졌다. 덕왕이 일본인과 제휴한 활동이 표면화되면서, 몽골인과 한인, 일본인에게조차 기이하게 들리는 ‘蒙疆’이라는 지역개념이 등장한다. 실제로 덕왕 자신이 ‘몽강’이라는 표현에 강하게 반발했다. 1938년 일본방문에 즈음하여 당시 일본의 近衛수상에게 ‘몽강’을 ‘蒙古’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덕왕에게 그것은 단순한 지역 명칭내지는 정권의 호칭 문제를 넘어 정권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였다. ‘몽강’에는 ‘중국의 변강’이라는 뜻이 있어 스스로를 ‘몽강정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독립한 몽골정권’이 아니라 ‘중국에 예속된 지방정권’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¹⁸⁾ 한편 같은 무렵 王精衛 그룹과 일본군인의 협의에서는 왕정위측이 “蒙疆의 辭句는 蒙古 및 新疆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을 ‘內蒙地方’으로 정정할 수밖에 없었다.¹⁹⁾

덕왕은 일본의 원조를 토대로 내몽골의 통일과 독립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은 ‘만주국’과 중국전체에 대한 정책에서 ‘몽강정권’의 위치를 검토했다. 그 결과 만주국의 몽골인지구인 興安지방은 제외시키고 ‘진북’정권을 더함으로써, ‘몽강정권’의 인구 중 압도적인 다수를 한인이 차지하는 등 덕왕의 구상은 거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끝났다. 내몽골인의 오랜 숙원인 내몽골의 통일을 戰後에 어찌되었든 간에 실현시킨 것이 몽골족 출신 중국 공산당원인 烏蘭夫의 지도에 의한 ‘내몽골자치구’의 성립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중국에 대한 군사침략은 이처럼 ‘만주사변’을 일으켜 괴

18) 陶布新整理, 1984, 『內蒙古文史資料第十三輯: 德穆楚克棟魯普自述』, 呼和浩特,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內蒙古自治區文史資料委員會, 77~87쪽.

19) 「日華協議記錄及同諒解事項並日華秘密協議記錄」, 1938년(昭和 13) 11월 21일, 外務省編纂, 1965,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下)』, 原書房, 403쪽.

외국이 ‘만주국’을 만들고, 이어서 ‘蒙疆’과 ‘北支’로 진격해서 중국전역으로 확대되었다. 그것은 중국의 민족주의와의 전면 대결이면서 한편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보편적 국제주의’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다. 일본의 군사행동의 전개에 대응해서 일본, 만주국 그리고 중국 전토를 포괄하는 지역 질서의 이념이 요구되었다. 그때 ‘보편적 국제주의’를 대신한 것이 ‘지역주의’이고²⁰⁾, 구체적인 지역개념으로는 ‘東亞’가 부각된다. 사실 ‘동아’는 戰前期제국의회에서 수상·외상의 연설에서도 193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상징이었다.²¹⁾

원래 머리말에 언급한 것처럼 ‘동아’라는 단어는 메이지 초기부터 존재했다. ‘東亞同文’이라는 표현에 전형적으로 보이듯이 ‘단순한 지리적 호칭 이상으로 구미열강의 진출에 대항하는 아시아 여러 국민의 연대라는 의미를 함축’²²⁾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지역주의가 대두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맥락으로 ‘동아’용어는 ‘東亞協同體’, ‘東亞新秩序’, ‘大東亞共榮圈’으로 사용된다. ‘지역주의’는 나치독일에서 도입한 地政學의 논리에 기초하였지만, 처음에는 ‘보편적 국제주의’와 ‘국가주의’를 매개하는 역할로서 제시되었다. “이윽고 일중전쟁 발발 후 일본의 대륙진출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성장한다.” 그리고 ‘보편적 국제주의’와 대립해서 ‘지역적 협동체를 근간으로 한 세계신질서’ 구상으로 나간다. 그 이론화 과정에서 원용된 것이 ‘면로주의를 중요한 선례로 해서, 칼 슈미트가 구성한’ 歐洲廣域國際法의 이론이었다.²³⁾ 일본이 지향하는 광역적 지역

20) 三谷太一郎, 1974, 「國際環境の變動と日本の知識人」 『大正デモクラシー論』, 中央公論社, 230~274쪽. 이후의 기술은 이 논문에서 참조한 부분이 많다.

21) 佐藤誠三郎 / R・ディング만 編, 渡辺昭夫 著, 1974, 「對外意識における<戰前>と<戰後>」 『近代日本の對外態度』, 東京大學出版會, 267쪽의 제 3表, 「アジアに關するシンボルの種類別使用頻度」를 참조.

22) 渡辺昭夫, 앞의 논문, 234쪽.

23) 三谷太一郎, 注(20)의 논문을 참조.

개념으로 ‘東方’은 너무 막연했고, ‘東洋’도 너무 크고, 또 漢民族에게 ‘동양’은 일본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적절하였다. ‘極東’은 동쪽의 끝이라는 뜻으로 지나치게 서구적 표현이었고, 또 ‘위싱턴 체제’를 연상할 수 있는 개념이었다. 결국 ‘동아’밖에 없었다. 다시 최종적으로 현재의 베트남(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인도네시아(네덜란드령 인도차이나)까지도 포함해서 ‘대동아’로 확장된다. 이 과정을 보면 매우 아이러니하지만, ‘보편적 국제주의’를 서구적 세계관으로 인식하고 거절한 일본이었지만 이를 대신한 ‘신질서’ 구상도 근본을 살펴보면 서구의 개념이고, 그 구상을 표현해야 할 지역개념 역시 ‘East Asia’의 번역어인 ‘동아’를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서구의 시각과 틀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가장 가까운 아시아의 ‘신질서’조차 표현할 수 없는 채 대일본제국은 붕괴했던 것이다.

맺음말 - 지역개념의 정치성-

이 글에서는 근대 일본의 대외진출 과정에서 수반된 일본인의 대외관으로 형성된 지역개념을 살펴보았다. 가장 가까운 국가이자 민족인 조선을 제외하고 ‘滿鮮’ ‘滿洲’ ‘滿蒙’ ‘蒙疆’, 그리고 최종국면에 가서는 그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東亞’, 더 나아가 ‘大東亞’, 이 모두가 그 지역에서 나온 자생적 개념이 아니라 외부에서 설정한 개념이었다. 게다가 일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지역개념이 가리키는 범위는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만주인은 소위 ‘만주’를 결코 ‘만주’라고 부르지 않았고, 이 세상에 ‘만주’라는 지역은 원래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몽골인은 왜 ‘만주’와 함께 묶어 ‘만몽’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또 ‘몽강’은 몽골인에게 매우 기묘하게 들렸고, 한인은 ‘몽골과 新疆’으로 오해할 위험성도 있었다. 다음과 같은 지

적도 있다.

‘지역’을 둘러싼 문제는 요컨대 그것이 마치 현실적인 여건으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반면에 매우 자의적으로 묶어 어떤 인위적인 구역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역’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가 있다.²⁴⁾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지역분쟁, 민족분쟁의 다수가 제국주의 시대에 외부에서 설정한 지역의 틀에 기인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결국 진출했던 지역의 주민에게 이해될 수 있는 제국주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음을 증명할지도 모른다. 일본도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고, 그 행동범위를 설정하고, 멋대로 지역개념을 만들어 내었다. 당연히 그 지역에 생활하는 사람들과는 무관한 설정기준에 기인하고 있었다. 그것이 戰前期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접근방식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예를 들면 ‘環太平洋’ 또는 ‘環日本海’라는 과거 우리들이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지역’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만약 이상적인 지역으로의 접근방법이 있다면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자생적으로 일정한 연대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곳을 ‘지역’으로 인식하고, 그 지역에 연대의식이 생기는 내재적 논리를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도 새로운 ‘지역’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바라건대 이들 ‘지역’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무관한 일본인만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지역’개념이 아니기를.

24) 矢野暢, 1986, 『冷戰と東南アジア』, 中央公論社, 250쪽. 다만 矢野가 말하는 ‘지역’이란 ‘국가’의 상위개념이고, 이 글에서 다루는 ‘지역’과는 의미가 약간 다르다.

부 기

- * 본 원고의 번역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의 사쿠라자와 아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 * 독해의 편의를 위해 의역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데서 발생한 오류는 전적으로 본 역자의 잘못이다.

주제어: 만주, 만몽, 만강, 만선, 만선사, 지역개념

투고일: 2009년 9월 12일, 게재확정일 2009년 11월 3일